



청년실업과 대학교육

이 만 우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고 십년 가까이 구직전선을 뛰어다니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2003년 11월 고용동향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율이 8.0%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체 실업률 3.4%의 2배를 넘는 것으로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청년실업은 사회문제가 이 전에 심각한 가정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적령기도 놓친 과년한 자녀를 둔 집안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질서도 뒤틀리고 있다. 실업은 모두 고통스럽지만 청년실업의 경우 한 사람의 일생이 통째로 망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질서가 뒤틀리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불황이 지속되어 신입사원을 뽑지 못하다 보니 최말단 직원이 대리급인 부서가 늘어나고 비정상적인 연령구조는 업무의 순차적 승계에 의한 지속성 유지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투

자의욕 저하에 의한 고용인원의 축소 이외에도 대학교육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직장을 찾아 헤매는 구직자가 넘쳐나는 데 비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생산직은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대졸신입사원들이 월급만큼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필요한 노동력을 외국인 불법취업자에서 찾아내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마찰에 의한 청년실업의 증가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점에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과 아울러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II. 청년실업의 현황 및 원인

청년실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에 의하면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대의 실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실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투자욕 저하에 의한 고용인원의 축소 이외에도
 대학교육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직장을 찾아 헤매는 구직자가 넘쳐나는 데 비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생산직은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

1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대의 실업을 청년 실업으로 정의한다. 청년실업은 일반적으로 생애 첫 직장을 잡는 데 실패한 것으로서 한 사람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중장년층의 실업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실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OECD의 청년실업 기준에 의하여 2001년의 전체실업율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전체실업율 4.8%에 비해 청년실업율은 10.6%, 일본은 5.0% 대 9.7%, 프랑스는 8.8% 대 18.7%로서 일반적으로 두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도별 추이를 보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실업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97년에는 전체실업율 2.6%에 비하여

청년실업율은 5.7%, 1998년에는 7.0% 대 12.2%, 2000년에는 4.1% 대 7.6%, 2002년에는 3.1% 대 6.6%로서 국제적 추세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청년실업자의 특징은 최근 대학졸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졸 이상 청년실업의 비중은 1997년에 28%에서 2002년에는 36%로 급격히 증가된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실업의 급격한 증가는 고학력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노동수요 측면도 문제이지만, 특히 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수준에 맞추지 못한다는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의 지속, 기업투자욕의 격감, 경력자 우대경향의 확

<표 1> 대졸 실업자 수 추이

구 분	청년실업자(천 명)	대졸 이상 학력자(천 명)	비중(%)
1992년	333	90	27.0
1997년	322	90	28.0
2000년	403	121	30.0
2001년	388	127	32.7
2002년	342	123	36.0

산 및 대학교육의 부적응화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수요는 생산물 수요의 파생수요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최근 성장의 침체로 생산물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노동수요가 감퇴되고 실업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 신규 대졸자를 약 30만 명으로 보면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4~5%의 경제성장이 요구된다. 특히 누적된 미취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경제성장이 요구되는데, 최근 저율의 성장이 지속됨으로써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업의 투자억욕 감퇴도 고용위축을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억욕을 위축시킨 원인은 기업구조조정 무리한 추진에도 영향이 있다.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과도한 차입경영을 지목한 김대중 정부는 부채비율 감축에 기업개혁의 중점을 두었다. 부채비율이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써 이를 감축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력에 한계가 있는 대주주 개인이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없는 실정에서 계열사간의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계열사간 내부지분율이 40%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지분구조가 형성되고 말았다.

정부는 계열기업간 순환적 주식보유에 의한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출자총액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금융계열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출자총액규제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우량기업들은 자사주 취득으로 주식유통물량과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총수를 줄임으로써 경영권 보호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수준의 우량기업도 수조 원에 이르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이를 더 늘려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발행주식 총수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을 줄이는 것으로 축소경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기업확장을 위한 신규자금의 조달처가 아니라 적대세력에 대비하여 자사주 매입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략하고 말았다. 부채비율 축소정책과 함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량기업의 투자재원은 더욱 고갈되었고 신규투자 와 신규고용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대졸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여 채용하는 관행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우리 대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우수인력을 고임금을 제시하여 채용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경력직 사이의 직장이동은 결국 신입사원의 신규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들 사이에는 직장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오래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장선택 방식이 서구화되고 자주 직장을 옮겨도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었다. 기업들도 필요한 인력을 사내교육을 통해 육성하기보다도 외부에서 스카웃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의 부적응화도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졸업자 수는 1981년 12만 명에서 2002년에는 55만 3천

명으로 4.6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인 팽창에 비해 교육의 질은 떨어졌고 급속히 변하는 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극히 부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내지 못함으로써 대졸실업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교육규모로 보아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IMD가 평가한 대학교육의 경쟁력수준은 조사대상 49개국 중에서 4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경기침체에도 영향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실패와 부실한 대학교육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Ⅲ. 정부의 대책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3년 9월에 마련된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청년실업을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하고,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시장 인프라를 완비하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 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기능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체제를 개편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활동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위해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대학의 기업활동과 기업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산학협력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유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도록 했다.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구축은 직업지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 직업지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적성검사와 흥미검사를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확대하고 2005년까지는 각급학교에 직업지도과정을 신설하고 전임 직업지도교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며, 청년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고용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 특성별 노동시장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단기대책으로는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노동·복지·문화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신규 공직 채용 확대, 임시직 일자리 제공 등 공공부문 주도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인턴 및 연수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직장 체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판 평화봉사단으로 해외근무 경험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인턴 및 연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기업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은 대상 및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훈련을 확대하고,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 효

과가 큰 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 산업의 자격 종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취업알선을 위해 청년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윈스톱으로 제공하고 Work-Net을 통한 청년층 구직활동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IV. 기업과 대학의 대책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인력의 수요처인 기업과 공급처인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사항은 IT 인력교육이다. 미취업 청년들을 정부가 지원하여 IT 교육을 시켜 국내취업전선에 내보내고 해외에도 진출 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IT 인력교육의 가장 큰 장애는 능력있는 교수진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급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여 모셔가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임시직 수준의 교수요원으로 취업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주도의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의 자질에 대한 인력수요층인 기업들의 불신도 문제이다.

IT 교육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수인력을 직접 채용할 여력도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선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들 기업은 이미 확보된 자체의 전문인력을 순환보직에 의해 교수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T 부문이든 기타 제조업 부문

이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주로 신규직원 고용능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창출 기업이 보다 많은 신규직원을 고용할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익을 얻게 되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신입사원을 뽑아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신입사원을 고용할 보다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비용 인정에 추가하여 일정율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급여의 5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면, 이익을 내는 기업의 입장에서 급여의 비용 인정과 추가적 소득공제를 통해서 급여액의 46%정도에 해당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절반 정도씩의 급여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신규직원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있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신규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상당한 세수감소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더 거둬서 정부가 주물럭거리다가 낭비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주어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은 이익을 내는 건실한 기업이 신규직원의 고용을 확대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제혜택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공급자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성을 강조해야 한다.

”

할 것이다.

기업의 고용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성과와 연계된 임금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 지급능력이 늘어날 때에는 현금이나 자사주를 성과상여금으로 추가적으로 지급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임금삭감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성과가 임금과 직결된다면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수익성을 높여 나갈 수 있고, 이는 신규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실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고용자에 대한 과잉보호도 원인이 되고 있다. 과잉의 고용보호는 실업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 해고의 어려움을 두려워해 신규고용을 줄임으로써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노동조건 유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나라들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고용창출로써 실업율을 줄이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복돋아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과도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과

도한 보호정책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이 단기간에 심화된 것은 공급자중심의 교육방식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나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경우 질적 수준이 기업의 기대수준에 미달하고 있어서 전반적 공급은 많으나 고급인력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대학졸업자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업은 경력자를 선호하게 된다.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고학력자들이 하향취업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내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졸자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이 실시한 2002년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54.8%에 달하고 있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뒤틀림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마다 휴학생이 늘어나고 고시준비생, 군입대대기자, 해외유학준비생 등 실제로는 실업상태에 있는 학생

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해외어학연수생들이 대폭 늘어나고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옮기려는 대학중도포기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힘들게 공부해도 취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공계 기피현상은 국가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왜곡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특히 우수인원이 의과대학으로 집중되고 의사들 중에서도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몰리고 있으며, 흉부외과는 정원미달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고도화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교육체제와 교과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노동수요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학 입학시험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복수전공과 이중전공을 확대하고 자기 전공분야를 심화하여 이수할 학생을 제외하고는 수요에 맞추어 다수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청년실업이 심화된 이유로는 기업투자가 극히 부진하여 기업이 신규고용을 대폭 줄인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실업률 수준보다도 청년실업률이 대폭 증가된 것은 기업의 채용관행의 변화에 원인이 있다.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함에 따라 신입사원을 줄이고 이미 검증된 경력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공급자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성을 강조해야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반면 기업들은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기업계와 교육계가 힘을 모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성준**

참고문헌

- 박성준(2003. 9. 5). “고학력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심포지엄자료.
- 엄동욱(2003. 12. 3).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4년 전망”. 노동연구원.
- 이상우·정권택(2003. 4. 9). “청년실업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395호.
- 정부관계부처합동회의자료(2003. 9. 22). “청년실업현황과 대책”.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증권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대학교육편집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